

제 1 교시

수능특강 독서 2부 사회·문화 평가원화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내 운명이 맞다면 아무리 밀어내고 돌아선대도**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오르비 섹시스타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39p)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는 않는다. ㉠ 지각이란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며, 조직하고 인식하며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의 상(相)으로 선택·조직·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감각은 상품의 광고나 포장, 상표명 등과 같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 기관의 반응이다. 감각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 받아들이는 반면에 지각은 그러한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 기관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 즉 심리적 편견이 있을 경우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다.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이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이다. 즉 소비자들이 맛, 느낌, 가격, 포장 형태 등을 통해 브랜드 간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인체의 감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부호화\*됨으로써 신경 기관에 전달된다. 이 자극의 수준을 식역 수준이라고 한다. 식역 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을 절대 식역이라 한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차이를 ㉣ 느껴서 알 수 있는 지점이 그 자극에 대한 사람의 절대 식역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고속 도로에서 특정 야립 간판\*을 볼 수 있는 거리는 개인의 절대 식역이다. 운전자가 여러 개의 야립 간판을 지날 때와 같이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하에서는 운전자의 절대 식역은 높아지게 된다. 즉 운전자의 감각은 더 ㉤ 느리고 무디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된 야립 간판을 계속 보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할 때, 어떤 하나의 특정 야립 간판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모든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감각의 적응 문제 때문에 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은 광고 캠페인을 규칙적으로 변화시킨다.

다음으로 개인이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변별 식역이라고 한다. 베버는 두 자극의 변별 식역은 절대적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자극의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등식으로 표현되는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변별 식역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실제 양은 최초 자극의 세기에 달려있다.

$$K = \frac{\Delta I}{I}$$

(단,  $K$ :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  $\Delta I$ : 나중 자극의 세기-최초 자극의 세기(자극의 변화량),  $I$ : 최초 자극의 세기)

한편 소비자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극을 통해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극 일반화의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일어나며, 따라서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될 수 있다. 자극 일반화를 통해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져 자극에 대한 평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충성도 (brand loyalty)와 브랜드 수단화 (brand leveraging)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 충성도는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며 해당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호와 만족, 반복적 이용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주변에 홍보하며, 신제품이 나왔을 때 믿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 크게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동적 충성도는 소비자가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일정 시간에 걸쳐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된다. 반면 태도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애착과 호감을 가지고 미래에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잠재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결될 개념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향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면 행동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 높아지게 된다.

브랜드 수단화는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는 비용을 ㉦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제품에 기존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비용을 40~80%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커와 켈러는 브랜드 수단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지각적 조건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 개의 제품들 간에 연결의 적절함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으로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써 자극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부호화: 일정한 의미를 가진 기호나 문자로 변환.

\*야립 간판: 고속 도로변 등지의 논이나 야산에 설치된 광고판을 말하며 대부분 광고면의 크기가 가로 20m, 세로 10m인 대형 광고판.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각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소비자가 갖는 편견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각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지각과 감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절대 식역과 변별 식역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 ④ 지각과 감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베버의 법칙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지각과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과 이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서술하고 있다.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② ㉡은 외부의 자극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다.
- ③ ㉠을 하기 위해서 ㉡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 ④ ㉠을 통해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은 ㉠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3.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 마트는 가격이 싸고 신선한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간판 광고’로 제작하여 게시하였지만 인쇄된 문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마트 사장은 기존 간판 광고를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으로 교체하여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가격 등을 움직이는 글자로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자 ○○마트와 인접한 여러 상점들도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설치했다.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은 처음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반복되는 전광판 광고의 내용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두커피에 사용되는 커피콩의 가격이 상승하자 커피 전문점 S에서는 아메리카노 커피의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자 동네의 작은 커피숍도 아메리카노 커피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였다. 동네의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커피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하고, 커피 전문점 S와 동네의 작은 커피숍 가운데 가격 인상이 작게 느껴지는 커피숍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 ① (가)에서 ○○마트의 초기 간판 광고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인쇄된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절대 식역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가)에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여러 상점의 전광판 광고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광판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 식역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③ (나)에서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커피숍보다 커피 전문점 S의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인상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 ④ (나)에서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두 커피숍의 커피 가격 인상분은 같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극 간의 차이는 최초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 ⑤ (가)에서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처음 접한 사람들과 (나)에서 커피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이 받은 자극을 부호화하여 신경 기관에 전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제약 회사의 ♣♣표 소화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소화제이다. 이것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효과를 본 A 씨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이 소화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고, 소화제의 효능이 좋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A 씨는 B 씨에게 이 소화제를 소개했다. 평소 △△ 제약 회사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B 씨는 A 씨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 소화가 안될 때, ♣♣표 소화제를 구입하려고 한다. 한편 △△ 제약 회사는 브랜드 전문가인 아커와 켈러의 견해에 따라 ♣♣표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신제품인 비타민 C 영양제에도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다.

- ① A 씨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볼 수 있군.
- ② A 씨의 △△ 제약 회사의 ♣♣표 소화제 선호는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 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B 씨와 같은 고객이 늘어나면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④ △△ 제약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표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사용한 것에는 신제품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겠군.
- ⑤ △△ 제약 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표 소화제와 신제품 간에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소비자가 ♣♣표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겠군.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용(受容)하는
- ② ㉡: 감지(感知)할
- ③ ㉢: 둔화(鈍化)되는
- ④ ㉣: 추앙(推仰)하게
- ⑤ ㉤: 절감(節減)하기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41p)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의 공급이 늘때 사업장의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 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중차분법 사용이다.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A)와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B)를 비교한다.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되었다고 하여 이중차분법이라 부른다.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개] 임금이 미친 순 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서의 임금 변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왔다. 첫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의 경우,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인 기준 시점 X가 있고, X의 1년 전을 Y, X의 1년 후를 Z라 하면, A는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로

측정하고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중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고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셋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민자 유입 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 ②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은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 노동 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 ④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현지인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이 이민에 관한 경제적 쟁점의 대표적인 배경이다.
- ⑤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 관계는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7.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가?
- ②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추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 ③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 ④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⑤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임금 하락이 크게 발생하는가?

8. [가]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연구자 M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갑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갑 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는데, 을국에 2020년 3월 초 내전이 발생하여 을국에서 갑 도시로의 대규모 이민이 발생했다.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2020년 2월 갑도시의 평균 임금은 주당 \$1,000이었으나,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후 2021년 2월 집계한 주당 평균임금은 \$950이었다. M이 갑 도시의 임금 변화를 연구하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 갑 도시와 같은 국가 내의 병 도시의 임금 변화와 비교. 병 도시는 갑 도시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민자 유입은 전혀 없었으며, 병 도시의 주당 평균 임금은 2020년 2월에 \$1,000, 2021년 2월에 \$930이었음.

㉡: 갑 도시의 직전 1년간의 임금 변화와 비교. 갑 도시의 2019년 2월 주당 평균 임금은 \$980이었음.

- ① 갑 도시의 B는 \$950에서 \$1,000를 빼서 계산한다.
- ② M이 이중차분법에 ㉠을 이용한다면 A는 -\$70이다.
- ③ M이 이중차분법에 ㉡를 이용한다면, 이민자 유입이 갑 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다.
- ④ M이 이중차분법에 ㉡를 이용하면 ㉠을 이용할 때보다 A의 값이 크다.
- ⑤ M이 이중차분법에 ㉠, ㉡ 중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 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9.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민자 유입으로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면 ㉠이 약할 수 있다.
- ②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의 증거로 볼 수 없다.
- ③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곳은 ㉠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의 유입은 원활한 이민자 유입보다 ㉠이 약할 수 있다.

[10~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42p)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 상환이라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 훼손되고 국가의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 통용되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기준에는 3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이다.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 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라 부른다.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비영리 공공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 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 공단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공공 부문부채’라 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 전력 공사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 160여 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이다.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 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공적 연금의 총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총당 부채이다. 공적 연금의 총당 부채 중 국제 통화 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이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 주체로서 고용 계약을 ㉣ 체결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총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공적 연금의 총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적 연금의 총당 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일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국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 국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그 포함 범위를 축소해 가며 설명한다.
- ②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론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소개한다.
- ③ 다양한 현상을 비교 및 대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낸다.
- ④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정 용어의 사용에 대한 쟁점을 밝힌다.
- ⑤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 사용의 장점을 나열한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상황이다.
- ② 연금의 총당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한 것이다.
- ③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정부 부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적 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 ⑤ 국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포함 범위를 적용하여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 정부의 회계 및 기금상 빚을 포함한다.
- ② 공무원 연금 공단 등 공적 연금 관리 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의 정부 범위를 상정한다.
- ④ 비영리 공공 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개념이 된다.
- ⑤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부 부채, 악어의 입에 빠지다”**

중앙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며 악어의 벌린 입 모양으로 격차가 벌어진 결과이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수치가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1%에 비해 크게 낮아서 괜찮다는 보도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신문, 20△△년 □월 □일

- ①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
- ② 지방 자치 단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 ③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다.
- ④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해야 안전하다.
- ⑤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 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할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게 올라간다.

14.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과제: ㉠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거를 검증해 보자.

- 각 입장별 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주요 선진국의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공적 연금의 종류
- ㉠

- ① 주요 선진국의 연금 개혁 내용과 영향
- ②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 총당 부채 규모 추이
- ③ 한국의 공적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예상 추이
- ④ 한국의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연금 수입 추이
- ⑤ 한국의 공적 연금 총당 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

15. ㉠~㉡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 ② ㉡: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
- ③ ㉢: 일반적으로 두루 씌.
- ④ ㉣: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
- ⑤ ㉤: 밝고 분명하게 봄.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44p)

기후 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연구에는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어 2006년에 결과가 발표된 스텐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 기후 변화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때의 경제적 손실을 달리 해석하면 각각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러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다.

기후 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물 자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등으로 구분된 분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스텐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다고 보았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방법을 쓴다.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연 이자율이 1%라면 10,000원을 빌려줄 경우 내년에 10,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10,100원은 현재 10,000원의 가치를 갖는 셈이라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때 현재의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미래의 값이 현재에 얼마나 작게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이 된다.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할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 사이의 수치이며,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은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이다.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둘째,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다. 셋째,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작아진다.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그 값의 ‘현재 가치’라 부른다. 미래의 같은 시점에 발생한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각 시점에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해당 시점의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예를 들어 1부터  $T$ 까지  $T$ 개 시점에 걸쳐 경제적 손실( $V$ )이  $V_1, V_2, \dots, V_T$ 로 발생한다고 예상되고,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D_1, D_2, \dots, D_T$ 로 계산되었을 때, 각 시점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는 각각  $V_1D_1, V_2D_2, \dots, V_TD_T$ 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이들을 모두 더한 값, 즉  $V_1D_1 + V_2D_2 + \dots + V_TD_T$ 이다.

스텐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손실에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지는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그 현재 가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는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고, 경제적 이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되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스텐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텐 보고서에서 사용한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에서이다.

이에 대해 스텐 보고서의 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후 변화 영향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생태계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영향의 정책 평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과 별도로 스텐 보고서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되고 그 영향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16. 윗글을 읽고 스텐 보고서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후 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대해 전제된 가정은 무엇인가?
- ② 기후 변화의 영향을 측정할 때 할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논쟁이 촉발되었는가?
- ④ 기후 변화의 경제적 손실 평가에 사용한 할인 요소의 수치적 특징은 무엇인가?
- ⑤ 결론 도출에 이용된 방법론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논쟁은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특정한 값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더 크다.
- ②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제한적인 기간에 발생한다고 가정되면 스텐 보고서의 결론이 바뀔 수 있다.
- ③ 정부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사례에서 스텐 보고서와 같은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④ 스텐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의 경제적 이득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18. ‘할인 요소’와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할인율은 모든 시점에서 같다고 가정한다.)

- ① 같은 값이라도 더 먼 미래에 발생할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다.
- ② 할인 요소가 0에 가까울수록 미래 시점의 값의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 ③ 같은 시점의 두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큰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을 수 있다.
- ④ 미래 시점의 값과 그 현재 가치의 차이가 작을수록 1에 더 가까운 할인 요소가 적용된 것이다.
- ⑤ 할인율이 0에 가까우면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져도 1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

19.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주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할인율 가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체험

- 가정:

1. 기후 변화의 경제적 손실 일정액 (가)가 100년 동안 매년 발생함.
2.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일정액 (나)가 첫해에만 발생함.
3. 할인율은 7%, 4%, 1%가 될 수 있고, 각 할인율은 매년 같게 유지됨.
4. 할인율이 4%일 때 (가)의 현재 가치의 합은 (나)와 같음.

- 할인 요소 계산 공식: ...

- 도출 가능한 결과:

㉠

- ① 100년 후 시점의 (가)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7%일 때가 4%일 때보다 작다.
- ② 할인율이 1%일 때 20년 후 (가)의 현재 가치가 40년 후 (가)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
- ③ 첫해에 경제적 평가를 한다면 (나)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할인율이 7%일 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추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 ⑤ (가)가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 1을 바꾸면 할인율이 4%일 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추구의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20. ㉠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한다.
- ② 기후 변화로 인한 각 시점의 경제적 손실을 할인하지 않는다.
- ③ 현재가 미래보다 중요하다는 할인의 암묵적 전제를 부정한다.
- ④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더 작게 가정한다.
- ⑤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손실이 장기간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46p)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형법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기술한 것인데,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폭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법성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로서 특정 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공동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유책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비난 가능성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인 경우 그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는 유책성이 없다. 이 세 가지 성질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 한다. 이처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 즉 부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긴급 피난과 함께 정당방위가 있다.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하지만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가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정당방위 상황이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 상황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를 말하며 이를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이 흥기로 누군가를 가격하려는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이 바뀌어 흥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방위를 하는 행위자가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위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을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을이 갑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정당방위 상황이지만, 갑의 행위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방위행위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방위 행위는 주먹을 막는 것과 같이 방어만을 하는 보호 방위와 적극적 반격의 형태로 행해지는 공격 방위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 방위 행위를 행한다는 방위 행위자의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에서는 방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상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방위 행위에 상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 행위가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쓴 것이어야 하고, 여러 수단 중 방위자가 선택한 수단이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어야 한다. 요구성은 방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 및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는 요구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나 심신 상실자처럼 법률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자신을 침해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한 피난을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어 행위만 해야 한다.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한 것이라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 '과잉 방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공격하려는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이 행위는 과잉 방위이다. 즉 과잉 방위는 방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잉 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되지만 행위가 밤중에 일어나거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믿고 방위를 행한 경우를 ㉡ '오상 방위'라고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침해 상황이 있다고 오해하고 저지른 행위인 것이다. 이는 행위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과실임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함으로써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심신 상실: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유책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된다.
- ②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 ③ 심신 상실 상태인 사람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④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⑤ 급박한 피난 상황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침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2. 윗글을 읽고, 법률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법하지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 때문
- ② 범죄와 위법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 ③ 적법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행위자들이 행한 행위 때문
- ④ 여러 법령 중 무엇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든 행위 때문
- ⑤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인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힘든 행위 때문

2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격 방위이고 정당방위는 보호 방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오해하고 저지른 방위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③ ㉠과 ㉡은 방위 행위자의 행위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구분된다.
- ④ ㉠에는 ㉡과 달리 행위자에게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다.
- ⑤ ㉡은 ㉠과 달리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A:** 밤중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폭행해서 심하게 다친 사건 알지? 그 사건을 보고 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B:** 뉴스 기사에서 도둑이 집주인을 위협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어. 하지만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서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

**학생 C:** 도둑의 상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만약 도둑이 심신 상실자이고 집주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피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힘들 것 같아.

**학생 D:** 판결을 찾아보니 집주인이 맨손으로 도둑을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무기를 사용하여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집주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할까 봐 제대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E:**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방위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 ① 학생 A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군.
- ② 학생 B는 정당방위의 요건 중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군.
- ③ 학생 C는 요구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학생 D와 E는 방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법원은 집주인이 사용한 수단이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군.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47p)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는 본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반응을 ㉠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혐오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본질이 된다. 이와 같이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 형성된 혐오는, 사회적 인간관계로 그 방향이 바뀌어 특정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회 구성원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마련이다.

누스바움은 생리 심리학적 반응인 ‘개인감정으로서의 혐오’와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개된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를 각각 ㉡ 원초적 혐오와 ㉢ 투사적 혐오로 구분하였다. 원초적 혐오는 죽음 및 부패와 같이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 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발현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 전가한 것이다. 혐오가 정당화되려면 혐오의 대상에게서 초래된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투사적 혐오는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고 피력하였다.

혐오 표현은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혐오의 고취·선동 메시지를 제3자인 청중들에게 전달하여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 등을 ㉤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 이러한 해악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든다. 이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든다.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은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로 나뉜다. 법적 규제는 형사 범죄화, 민사 구제, 차별 시정 등과 같이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이며, 형성적 규제는 국가 기관 또는 시민 사회가 앞장서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라 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항

표현(counter-speech)’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혐오 표현이 ㉧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그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언행과 같은 대항 표현은, 방관과 묵인으로 힘을 얻는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자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양하는 미국에 비해,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 독일의 혐오 표현에 관한 법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독일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외부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된 경우, 즉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 집단 모욕죄를 인정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위와 같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인터넷망에 게시될 경우 유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 선동죄로 판단하며, 해당 인터넷망이 해외의 것이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 내에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존재한다.

한국 사회 또한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 만연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 표현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25.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혐오 표현의 개념
- ② 혐오 감정의 형성 과정
- ③ 혐오 표현의 부정적 영향
- ④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식의 유형
- ⑤ 혐오 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의 허용 범위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인적 차원에서, ㉡은 사회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규정된다.
- ② ㉠은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지만 ㉡은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 ③ ㉠은 정당화될 수 있는 두려움에 근거하지만 ㉡은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 ④ ㉠은 ㉡과 달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성된다.

27.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혐오 표현의 위해성은 대항 표현을 통해 제거되기 어렵다.
- ②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서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③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 ④ 국가 기관 주도의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은 법적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 ⑤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8. ㉠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독일에 거주 중인 A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단체인 호주의 한 연구소 홈페이지에 아우슈비츠가 허위라는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대인이 독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등의 비방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를 확인한 한 유대인이 모욕죄 등으로 A를 고소하였고, A는 모욕적 멸시 및 악의적 경멸에 의한 대중 선동죄, 집단 모욕죄 및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 위반으로 독일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 ① 독일 법원에서는 A의 비방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② 아우슈비츠가 허위라는 A의 주장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 것이다.
- ③ A가 호주의 인터넷망에 혐오 표현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에 근거한 결과이다.
- ④ A가 유대인에 대한 비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대중에게 널리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중 선동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 ⑤ A가 집단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A를 고소한 유대인이 그 자신을 포함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불러일으키는
- ② ㉡: 물려준
- ③ ㉢: 부추기거나
- ④ ㉣: 함부로 쓰일
- ⑤ ㉤: 널리 퍼지면서

[3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49p)

음세계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무역의 출현으로 국가 간의 통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역 구제 제도로, 이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무역을 담보하고 시장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서 국내 산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무역 구제 제도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제도와 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불공정무역 행위와 관련한 구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입품들 중에서 덤핑, 정부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 가격보다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 높인 물품들에 대해서 정부가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상품을 자국의 국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한다.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이유는 기업이 수출을 통하여 자국 내의 재고를 처분하려고 하거나, 최소한의 이윤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여 수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이것 외에도 수입국 시장 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또는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자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덤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세계 무역 기구(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타국 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분명하게 증명됐을 경우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 덤핑의 존재와 덤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조사하고 입증해야 한다. 만약 조사 중에 타국 기업의 덤핑마진이 수출 가격의 2% 미만이거나 덤핑 수입 물량이 해당 상품 총수입량의 3% 미만임이 밝혀지면 조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덤핑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임이 밝혀지게 되면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수출 기업은 가격을 합의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면할 수도 있다. 만약 양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기구는 피해국의 반덤핑 판정 과정이 WTO 반덤핑 협정과 일치하는지를 판정한다.

반덤핑 관세가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제도라면, 상계 관세는 ㉡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제도이다. 특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산업 혹은 기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수여자에게 혜택이 있게 될 때 이 재정적 기여를 보조금이라고 한다. 보조금은 각국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이를 지급받은 기업의 경쟁력에 왜곡을 가져와 무역을 교란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되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제3국에서 상대적 경쟁력 우위를 가지게 되어 해당

시장에 동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WTO는 보조금 및 상계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을 통하여 각 국가의 보조금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무역 교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 보조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첫째는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 수여자에게 혜택이 발생되어야 한다. 셋째는 특정 기업 또는 산업, 혹은 특정한 지역 내의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이 보조금의 제공이 제한되는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먼저 이해 당사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는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 보조금 지급과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증명해야 한다. 이후 이 기구에서 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판정하면 제소를 당한 국가는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이라는 법률 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이 한 법률 안에 다른 조항에서 이들을 다루고 있다. 한편 WTO는 국가와 그 국가들의 정부로 이루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도 하고 상대국의 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규율하기도 한다. 반면, 덤핑과 같은 기업의 행위는 직접 규율하지 않고, 덤핑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만을 다룬다.

30.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은 덤핑을 통한 수출로 자국 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한다.
- ② 공정 무역 행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와 달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 ③ 상계 관세는 반덤핑 관세와 달리 수입국의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 ④ WTO는 기업의 덤핑 행위와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취한다.
- ⑤ 덤핑이 적용되어 수입된 상품은 다른 기업의 덤핑이 적용되지 않은 동종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정부는 상품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을 지급해야 한다.
- ② 특정 기업이 정부의 정책 달성을 위해 공공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으로 볼 수 있다.
- ③ 국가는 자국의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의 산업을 구제할 수 있다.
- ④ ㉠을 받은 기업은 수출국과 WTO에 ㉠이 불공정 무역 행위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⑤ ㉠을 받은 기업이 특정 국가에 상품 수출로 해당 특정 국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해당 특정 국가는 ㉠을 지급한 국가를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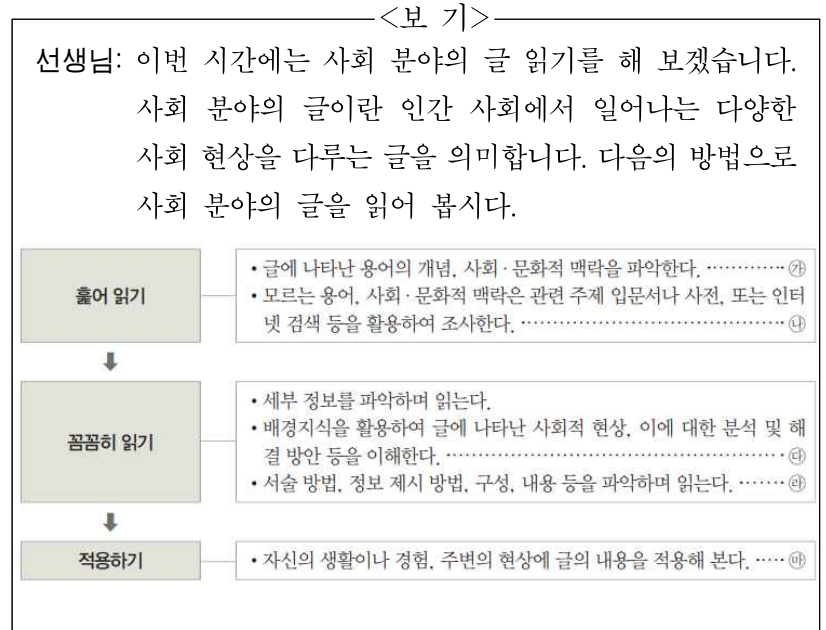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국의 ○○회사는 자국에서의 인쇄용지 판매가 저조하여 재고가 쌓이자 을국에 인쇄용지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서 수출했다. 이에 을국의 인쇄용지 제조 회사들은 갑국의 ○○회사에서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를 자국의 무역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무역 위원회는 ○○회사의 인쇄용지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덤핑 마진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 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회사는 을국과 수출 가격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갑국은 을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과정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됨을 문제 삼아 을국을 WTO에 제소했다.

- ① ○○회사가 을국과 수출 가격 협의를 한 것은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한 것이다.
- ② 무역 위원회의 반덤핑 조사는 ○○회사의 인쇄용지 덤핑 수출로 인한 을국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③ 무역 위원회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무역 위원회가 ○○회사의 인쇄용지 수출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 ④ 무역 위원회의 반덤핑 조사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회사의 덤핑 마진이 수출 가격의 2% 이상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⑤ 갑국이 을국을 WTO에 제소한 이유는 갑국이 ○○회사의 덤핑과 을국의 인쇄용지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3. <보기>는 윗글을 제재로 한 수업이다. ㉡~㉤의 읽기 과정에 따른 학생의 활동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무역 구제 제도'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군.
- ② ㉢: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무역의 출현'에서 '새로운 형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인터넷 뉴스의 기사들을 통해 이 형태를 알아보니 수입 절차 강화, 자국산 사용 의무화 등이 있군.
- ③ ㉣: 사회 시간에 무역의 확대에 의한 문제점을 학습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떠올려 보니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
- ④ ㉤: 무역 구제 제도를 무역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한 후,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 제도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군.
- ⑤ ㉥: 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웠는데, 교과서에 있는 공정 무역 행위와 이에 대한 구제 제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

34. <보기>는 읽글을 제재로 한 수업에서의 학습 활동이다. 학생이 쓴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다음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 글을 바탕으로 써 보자.

A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B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B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A국에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있다. B국으로부터 수입된 스마트폰의 가격이 A국의 스마트폰 가격보다 낮아서 A국의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조사해 보던 중, B국이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 ① A국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A국은 B국의 보조금에 특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 ② A국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B국을 제소했다면, A국은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발생한 피해의 원인임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 ③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B국은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 ④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는 B국의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B국의 보조금이 B국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 ⑤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한 후에 B국이 A국의 피해와 관련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A국은 B국에서 수입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3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번 공사는 천장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 ② 그는 좋은 미술 작품을 고르는 안목을 높였다.
- ③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이 그의 지위를 높였다.
- ④ 자신의 꿈을 높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낸다.
- ⑤ 그 야구 선수는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높였다.

가독성을 위해 빈 페이지로 남겨두었다.

[36~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51p)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극장 경영자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 거슬러 올라가나 스크린 쿼터제가 실질적으로 ㉡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스크린 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15조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무엇일까?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자국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하여 저울질 했을 때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헌법 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고, 스크린 쿼터제는 이러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일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침해가 최소화되고,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하여 비중을 따져 볼 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 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일수 동안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화 매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가 있다. 우리 헌법의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는 ㉨ 평등을 의미한다. 스크린 쿼터제를 통한 문화 산업 보호는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고,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 영화에 비해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을 ㉩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평가들을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스크린 쿼터제의 합헌성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스크린 쿼터제의 등장 배경과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 ④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면서 문제점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면서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3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의 스크린 쿼터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 ② 스크린 쿼터제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 ③ 스크린 쿼터제를 변경하려면 영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측면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④ 극장 경영자가 자신의 극장에서 연간 80일 동안 한국 영화만을 상영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스크린 쿼터제는 경제적 시장 법칙의 자율성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문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38. [A]를 읽은 후 학생들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복리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의무 상영일수가 연장될수록 직업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사회 공동체를 위한 목적보다 중시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연간 의무 상영일수를 제외한 기간의 한국 영화 보호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의무 상영일수가 공공복리와 직업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깨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음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9. 윗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해외 수출 중심의 미국 영화 산업은 타국의 스크린 쿼터제의 철폐나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자국 영화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파키스탄은 외화 전용 극장과 자국 영화 전용 극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외화 전용 극장이라 하더라도 연간 일정 기간 이상 자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나 일본 등은 방송 쿼터 시스템 및 전용관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사실상 스크린 쿼터제의 기능이 유지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 201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였고, 한국 영화가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 쿼터제라는 보호막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화의 거대한 몰량 공세나 한국 영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는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동시에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①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 방법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국가가 법률로 뒷받침하는 스크린 쿼터제가 공익 달성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군.
- ③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이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입법 목적을 약화하는 상황의 변화가 스크린 쿼터제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군.
- ⑤ 외국 영화에 대해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군.

40.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스크린 쿼터제를 해당 연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극장 경영자가 어쩔 수 없이 한국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③ ㉢은 극장 경영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
- ④ ㉣은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 ⑤ ㉣은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41. ㉠~㉣의 사전적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 ② ㉡: 규칙으로 정함.
- ③ ㉢: 말려서 못 하게 함.
- ④ ㉣: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는 일.
- ⑤ ㉣: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림.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53p)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학습은 ㉠ 인지적 학습, ㉡ 행동적 학습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정보를 기억 속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외적 탐색을 하게 된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대중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 등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인지적 학습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인지주의 심리학은 스키마 이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주목한다. 스키마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일컫는다.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게 얻게 된 지식에 의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첨가, 조율,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첨가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A사의 운동화는 쿠션감이 좋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기존의 A사의 지식 구조에 이 새로운 지식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첨가에는 연상적 학습이 포함된다. 연상적 학습이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연상적 학습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의 효과가 우수하다. 첨가는 소비자의 지식 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지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율이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자신이 가진 지식 구조를 검토하여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율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지식 구조 중 일부가 서로 결합되어 보다 일반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사의 여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여러 특성이 결합되면 ‘B사의 서비스는 고품질이다.’와 같이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구조화란, 기존의 지식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구조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구조화는 첨가나 조율과 달리 지식 구조의 위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광범위한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통신사인 C사가 기존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새롭게 세분화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a, b, c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였다면 소비자는 C사에 대한 하나의 지식 구조가 아니라, C사의 하위에 a, b, c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과 함께 a, b, c 각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지식 구조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구조화에 해당한다.

한편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행동적 학습이라고 한다.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멋진 배우의 모습이 짝지어져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소비자가 배우에 대해 가진 호의적인 태도가 해당 상품으로 전이되어 상품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역시 행동적 학습의 결과이다.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에 관한 연구는 학습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보다 자극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두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를 중요하게 다룬다.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적 토대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에 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반복한 결과, 나중에는 먹이가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개의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먹이가 침의 분비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이때의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이 먹이인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이 중성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 사라져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 자극이 된다. 이때 조건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부해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에 의해 야기되었던 반응과 매우 유사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제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 연예인에 대한 좋은 태도가 제품에 전이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는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여러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 자사 제품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서도 이 연예인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연예인과 자사 제품의 관계가 소멸될 수 있다.

작동적 조건화는 상자에 가둔 흰쥐를 대상으로 한 스키너의 실험에 기반하고 있다. 작동적 조건화는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와 처벌을 의미한다.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부정적 강화라고 하고,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긍정적 처벌,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 처벌이라고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선물을 증정하여 소비자가 다시 그 상점을 찾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강화를 통해 구매를 증가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점에서 불친철을 몇 차례 경험한 소비자가 그 상점을 다시 찾지 않는 것은 부정적 처벌에 의해 구매가 감소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학습을 통해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끊임없이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학습은 합리적인 구매 행동을 위한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때때로 소비자의 학습이 구매 행동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 반복적 학습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인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4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스키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이다.
- ②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자신의 지식 구조를 검토하여 일반화할 수 있다.
- ③ 어떤 자극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자극은 중성 자극이다.
- ④ 소비자의 학습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경우도 있다.
- ⑤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은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달리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4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③ ㉠과 ㉡은 모두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④ ㉠에 대한 연구는 ㉡에 대한 연구와 달리 소비자가 지니는 지식의 구조에 주목한다.
- ⑤ ㉡에 대한 연구는 ㉠에 대한 연구와 달리 소비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44.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스키너는 흰쥐를 상자에 가두어 놓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실험 내용
I	상자 안에 단추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를 마련해 둔. 흰쥐가 우연히 단추를 누른 뒤 먹이를 얻게 됨. 흰쥐가 이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됨. 흰쥐는 먹이를 얻기 위해 스스로 단추를 누르게 됨.
II	상자에 불편할 정도의 약간의 전기가 흐르도록 해 두고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차단되도록 함. 흰쥐가 우연히 단추를 누른 뒤 편안한 상태가 됨. 흰쥐가 이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됨. 흰쥐는 의도적으로 단추를 누르게 됨.
III	상자 안에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가해지는 장치를 마련해 둔. 흰쥐가 우연히 단추를 누른 뒤 전기 자극을 느끼게 됨. 흰쥐가 이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됨. 흰쥐는 단추를 누르지 않음.

- ① 실험 I에서 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먹이는 특정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긍정적 자극에 해당한다.
- ② 실험 II에서 상자에 불편할 정도의 약간의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자극을 가하는 것이다.
- ③ 실험 II에서 흰쥐가 의도적으로 단추를 누르게 된 것은 어떤 반응에 대한 선택적 보상을 통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실험 III에서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가해지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 결국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실험 III에서 흰쥐가 단추를 누르지 않게 된 것은 어떤 상점에서 불친절을 몇 차례 경험한 소비자가 그 상점을 다시 찾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갑은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갑은 소화가 되지 않을 때마다 먹던 D 소화제를 찾았는데, 시골에는 이 약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갑은 평소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던 E 음료수를 마셨더니 소화가 되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부터 갑은 졸음을 쫓을 때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될 때도 E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다.

(나)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을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을은 광고 모델로 차분하고 고상한 이미지로 유명한 연예인 F 씨를 기용하고, 제품이 등장할 때 그 이미지를 부각하는 화면과 음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몇 달 후 연예인 F 씨가 화장품 광고에서와 유사한 이미지로 어떤 제과 업체의 과자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 ① (가): 갑이 소화가 되지 않아 D 소화제를 찾은 것은 갑이 경험적 학습을 통해 갖게 된 D 소화제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겠군.
- ② (가): 갑이 소화가 안 될 때마다 E 음료수를 마시게 된 것은 갑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E 음료수에 대한 지식을 재구조화하게 된 것이겠군.
- ③ (나): 을이 연예인 F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신제품에 대해 광고를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겠군.
- ④ (나): 을이 연예인 F 씨를 광고 모델로 쓴 것은 F 씨의 이미지를 무조건 자극으로 하여 신제품에 대한 조건 반응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겠군.
- ⑤ (나): 을이 화장품 광고를 위해 기용한 연예인 F 씨가 제과 업체의 과자 광고에도 출연한 것은 을의 화장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떨어뜨렸을 수 있겠군.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55p)

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이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채무자,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채권에 기재된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유통 시장을 통한 매매가 자유로우며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 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서 주요 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회사의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경영권이나 배당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회사채는 상환 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 용이하다.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다. 따라서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자 이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를 신종 사채라고 한다. 신종 사채에는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이 있다. 먼저 ㉡ 전환 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전환 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을 제공하므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따라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 사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전환 사채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 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하려는 때의 주식 가격이 중요하다. 전환 가격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으로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전환 가격이 500원인 전환 사채 20개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4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자로 남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교환 사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의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다. 교환 사채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의 발행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회사채이다. 교환 사채는 교환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을 낮게 해서 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채무자로서 원금 상환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사채이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유발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의 부담이 낮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주가 되면 배당 소득이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금융 상품으로 유통되는 분리형과 신주 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의 경우 신주 인수권 자체에 별도의 가격이 생성되어 거래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 이외의 제삼자가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



46.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사채의 시장 가격은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 가격과 일치한다.
- ② 주식회사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 이외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유통 시장에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채권을 구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 ④ 신종 사채는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채이다.
- 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을 구입한 채권자에게 매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4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업은 2020년 1월 2일에 액면가 2만 원, 금리 연 5%, 만기 4년, 전환 가격 1만 원의 조건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였다. 이 전환 사채의 만기가 3년이 남은 시점인 2021년 1월 2일에 투자자 갑은 이 전환 사채 1,000개를 유통 시장에서 개당 1만 8,000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1년 후 2022년 1월 2일 현재, 유통 시장에서 이 전환 사채의 가격은 개당 1만 9,000원이 되었고 전환권의 행사가 가능해졌다.

(단, 이 회사채의 금리는 단리이며 채권의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회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나 회사채 매매로 인한 이익금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전환권의 행사나 전환 사채의 매도는 전량을 한 번에 하는 것만 가능하다.)

- ① 투자자 갑이 전환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만기까지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군.
- ② 투자자 갑이 2022년 1월 2일에 전환 사채를 시장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매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군.
- ③ ○○기업 전환 사채의 전환 가격이 9,000원으로 정해졌었다면 투자자 갑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더 늘어나겠군.
- ④ 현재 ○○기업의 주가가 1만 1,000원이라면 투자자 갑은 전환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전환 사채를 매도하는 것보다 더 이익률이 높군.
- ⑤ 전환 사채의 가격이 현재 금액에서 고정되어 있고 투자자 갑이 전환 사채를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액은 300만 원이군.

48.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채권을 구입한 즉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채권의 발행 주체에 따라 더 높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③ 채권의 시장 가격의 변화를 보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 ④ 만기일 내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 ⑤ 채권을 구입하면 발행 주체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4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발행 직후부터 추가적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 ② ㉠은 ㉡와 달리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전부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채무가 소멸된다.
- ③ ㉠과 ㉡는 모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 ④ ㉠과 ㉡는 모두 추가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 ⑤ ㉠과 ㉡는 모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50.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리형으로 발행된 채권은 채권의 소유자와 신주 인수권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 ②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따라 신주를 구입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만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비분리형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처음 발행 때 채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치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35p)

입법은 입법 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 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입법에는 법령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사법'과는 구분된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입법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지는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은 국회 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입법은 ㉠ '의원 입법'과 ㉡ '정부 입법'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제정의 주체를 고려하여 '정부 입법'에는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의 입법인 ㉣ '행정 입법'을 포함시킨다. 법규 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 총리, 행정 각 부의장이 각각 발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한다.

법률안을 입안\*할 때, 국회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통상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이라 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여론이나 의원의 의지,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입안되며, 정부 제출 법률안은 법률 소관 중앙 행정 기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안된다. 행정 기관의 입법인 정부 입법은 법령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 기관이 법률안을 작성한 후, 입법 절차를 시작하면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해당 법률안과 관계된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안의 수정 또는 보완 등을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진행하는데, 이때 법률안을 입안한 소관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동시에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 규제 개혁 위원회를 통한 규제 심사와 관련 행정 기관을 통한 각종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안의 적절성을 분석하게 된다. 규제 심사는 행정 기관이 입법을 통해 이루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규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비해 영향 평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법률안을 사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영향 평가를 요청받은 기관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결과를 법률안을 입안한 행정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입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다. 이후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거쳐 차관 회의 심의·의결, 국무 회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를 통해 의결된 후 정부에 이송되면, 법제처는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 회의에 상정한다. 국무 회의를 거친 공포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관보에 공포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쳐 비로소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비해 '행정 입법'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의 법제 심사까지의 과정은 법률의 입법 과정과 동일하나, 나머지는 법률의 입법 과정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은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 명령안이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소관 행정 기관에 의해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법규 명령으로 공포됨으로써 실질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또한 총리령과 부령은 법규 명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차관 회의 및 국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관 행정 기관에 의해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때 공포 전 각 부 장관의 결재를 받는 부령과 달리, 총리령은 공포 전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법규 명령안을 입안하는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입안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법규 명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위 법령의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부칙으로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 두어야 하는데, 법률의 시행일을 정할 때는 하위 법령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 정책 시행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행정 기관은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정 기관을 통해 입안되는 모든 법률이나 법규 명령은 전체 법령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이나 상위 법률, 또는 상위 명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입법 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입안에서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법령: 법률과 법규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국회의 심의를 받아 제정되는 법률, 시행규칙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이 있음.

\*입안: 어떤 안(案)을 세움. 또는 그 안건.

\*부서: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 또는 그런 서명.

5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려면 해당 법규 명령안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② 입법 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③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④ 부령은 국무 회의 의결이나 법제처 심사 절차 없이 각 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공포된다.
- ⑤ 각종 영향 평가는 법률안의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입법 예고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5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해 입안하는 법률안은 규제 개혁 위원회를 통한 규제 심사를 받지 않겠군.
- ② ㉡를 활용해 입안하는 법령안은 헌법이나 상위 법령을 고려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야겠군.
- ③ ㉢를 통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겠군.
- ④ ㉣를 활용해 입안하는 법률안에는 ㉡를 통해 제정된 법규 명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하겠군.
- ⑤ ㉣는 ㉠을 통해 제정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될 수 있겠군.

53. 입법 과정에서 ㉠이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규 명령을 입안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차관 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게 한다.
- ③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법규 명령이 공포될 수 있게 한다.
- ④ 입안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입안하는 법률안이나 법규 명령안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 한다.

5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 자격법  
 [법률 제12345호, 2020.12.22. 공포]  
 제21조(자격의 취득)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2. 「형법」 제188조, 제189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개정 2020.12.22.>  
 부칙: 제22조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나) □□ 자격 검정령 일부 개정령 공포안  
 1. 국무 회의 의결 주문  
 □□자격 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법(법률 제12345호) 제21조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참고 사항  
 1) 법규 명령안 및 신규 조문 대비표\* 별지 첨부  
 2) 입법 예고(2020.9.7.~10.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 규제: 규제 개혁 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 □□의 자격 검정 강화)에 대한 판단 포함  
 4) 국무 회의 의결 전인 법규 명령안, 기타 특이 사항 없음.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법령과 개정안의 조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것.

- ① (가)는 제22조에서 하위 법령에 일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으며, 부칙을 두어 법률 시행에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있군.
- ② (가)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나)의 입법이 완료되어야 하겠군.
- ③ (나)는 공포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공포안이며, 아직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지니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의 법규 명령안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판단되었겠군.
- ⑤ (나)는 국무 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규 명령인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공포될 수 있겠군.

55.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그 사건은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합시다.
- ② 질문에 한참의 간격을 두고 신중히 대답했다.
- ③ 그는 슬하에 자식 셋을 두고 고향에서 살았다.
- ④ 저런 사람을 집에 두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⑤ 이미 곁을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마라.

[56~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59p)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 모든 의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비례 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며 유권자는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이 대표적이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대표적이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한다. 최대 잔여 방식은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수에는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 등이 있다. 헤어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에 2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다. 그리고 각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수로 정한다. 만약 한 선거구의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인 선거구에서 최대 잔여 방식을 적용하면 헤어 기준수는  $1000/5 = 200$ ,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1000/(5 + 1) = 166.66 \dots \Rightarrow 167$ ,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1000/(5 + 2) = 142.85 \dots \Rightarrow 143$ 이 된다. 각각의 기준수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낸 몫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는 달라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고 평균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최고 평균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용하는 제수에 따라 동트 방식, 생라그 방식, 수정형 생라그

방식 등이 있다. 동트 방식은 제수가 1, 2, 3, 4, ...이다. 생라그 방식은 제수가 1, 3, 5, 7, 9, ...이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은 생라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제수가 1.4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제수는 동일하다. 어떤 방식의 제수를 정하더라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만약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각각 485표, 290표, 140표를 획득했는데, 동트 방식으로 의석수를 3석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제수인 1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485, 290, 140이므로 가장 큰 값을 가진 A 정당에 먼저 의석을 배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수인 2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242.5, 145, 70이 되는데, 이 몫들을 첫 번째 제수인 1로 나누어 얻은 몫 중에서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이때 가장 큰 몫이 290이므로 B 정당에 두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다시 세 번째 제수인 3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고, 이때 얻은 각각의 몫 161.66 ..., 96.66 ..., 46.66 ... 을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들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이때 가장 큰 몫이 242.5이므로 A 정당에 세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렇게 제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몫 중에 의석이 배분된 몫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몫들을 계속 비교하며 가장 큰 몫을 가진 정당의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는 달라진다.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값인 몫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득표수가 적은 정당에는 불리하다.

범주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고,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권한이 크고 정당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 중에서 유권자가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선거 원칙에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는 결국 정당이 제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 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만 국회 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국회 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수 대표제만 실시할 때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 ②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서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보다 많은 후보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 ③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개별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④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의 후보 중에서 유권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표 방식이다.
- 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5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유권자와 국회의원의 유대가 강해지게 된다.
- ② ㉠은 ㉡에 비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진다.
- ③ ㉡은 ㉠과 달리 사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대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다수 대표제에 비해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58.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최대 잔여 방식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는 ㉠

- ① 기준수가 클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겠군.
- ② 기준수와 관계없이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겠군.
- ③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 ④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의 소수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 ⑤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을 반영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5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국의 ㉠ 선거구는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이다.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5석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선거구에서 각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헤어 기준수를 활용할 것인지, 동트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정당	A	B	C	D	E
득표수	500	170	150	120	60
헤어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값	2.5	0.85	0.75	0.6	0.3

제수 방식	제수	각 정당별 몫				
		A	B	C	D	E
동트 방식	1	500	170	150	120	60
	2	250	85	75	60	30
	3	166.66...	56.66...	50	40	20

- ①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세 번째 순서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은 B 정당이겠군.
- ②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E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겠군.
- ③ D 정당은 동트 방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헤어 기준수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보다 유리하겠군.
- ④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C 정당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의석수를 배분받겠군.
- ⑤ 헤어 기준수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A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의 역설이 발생하겠군.

[60~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과 해설 61p)

통계에 기반하는 양적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대상이나 변인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치환해야 하는데, 이 치환 과정을 측정이라고 한다. 측정이 없이는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실행할 때는 측정과 척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측정은 미터, 킬로그램, 명, 개, 번과 같은 척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측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척도 수준을 달리하게 된다. 척도 수준에는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이 있다. 명목 수준은 대상들을 구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것으로, 척도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위계에 있다. 성별이나 종교 등의 항목에 대해 측정한 데이터는 명목 수준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명목 수준에서 각 선택지는 등가성을 가지며,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호 배타성과 모든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완전 포괄성이라는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명목 수준의 선택지에는 성별, 종교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값은 산술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상의 구분만을 나타낸다.

서열 수준은 명목 수준보다 상위 위계에 있다. 서열 수준이란 대상들 간의 순서를 측정하는 수준을 말하는데, 각 선택지에 대해 응답자가 부여한 서열은 산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값이 각 선택지에 대한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어와 수학 중에 좋아하는 과목의 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에서 응답자가 국어를 1, 수학을 2로 표시하였다고 할 때, 이 응답자가 국어를 수학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서열 수준보다 상위의 위계에 있는 척도 수준은 등간 수준인데, 등간 수준에서 각 선택지에 제시된 값은 ‘1-2-3-4-5’, ‘1-3-5-7-9’ 등과 같이 값의 간격이 동일하다. 등간 수준을 척도 수준으로 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값은 산술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 응답값을 가지고 사칙 연산 중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㉞ 어떤 대상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등간 수준의 항목에서, 응답값이 3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응답값이 9인 경우가 해당 속성을 3배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구자는 선택지를 1-3-5-7-9로 제시했을 수도 있고 3-6-9-12-15로 제시했을 수도 있다. 척도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위계에 있는 것은 비율 수준인데, 비율 수준에서는 응답값을 가지고 사칙 연산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율 수준은 일반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속도나 길이, 면적을 나타내는 척도는 비율 수준을 가지며, 절대 0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 심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분야에서 측정의 대상은 언어적 민감성, 대중 매체 친숙도, 의사소통 능력, 자아 효능감, 공격성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은데, 측정의 변인

역시 의사소통 주체들의 속성이나 인지, 태도, 행동 과정 등으로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대상이나 변인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측정을 조작화 또는 경험적 현실화라고 부른다. 그런데 연구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다양한 조작화를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조작화 방법을 선택하여 대상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기존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 조작화 방법을 사용하거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작화 방법을 새롭게 ㉟ 마련해야 한다. 둘 이상의 조작화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적 분야에서 조작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 리커트 척도이다. 이는 개발자 리커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선택지에는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그렇지 않다’ 등이 배열된다. 연구자는 각 선택지에 점수값을 부여하여 이를 통해 측정 결과를 도출한다. 리커트 척도에서는 5점이나 7점 척도가 주로 쓰이는데, 각 선택지의 점수 간 간격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열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오스굿의 의미 분화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 어의 차이 척도도 많이 쓰인다. 이 척도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 능력, 행위 등의 주관적인 의미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선택지의 양극단에 ‘약한 - 강한’, ‘작은 - 큰’ 등과 같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열해 양극단 사이에서 해당 속성에 대해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어의 차이 척도는 리커트 척도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각 선택지에 점수값을 부여하고 서열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된다.

통계에 기반하는 양적 연구 결과는 믿을 만한 경우가 많지만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는 일시적인 오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한 오류, 조사 시점의 상황으로 인한 오류, 자료가 수집되는 상황으로 인한 오류 등이 발생하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타당성은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비체계적인 측정과 관련된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은 다시 조사를 해도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든 응답자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선택지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측정하고자 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는 등의 설문지 자체 오류,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법이 잘못되는 등의 자료 처리상 오류 등이 발생하면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대상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60.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않은 것은?

- ① 측정에 사용되는 척도와 척도 수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② 의사소통 분야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③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경험적 현실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④ 양적 연구에서 측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61.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응답값이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② 각 선택지에 제시된 값의 숫자 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측정값이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④ 각 선택지에 제시된 값은 임의로 부여되어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대상의 속성에 대한 응답값은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 순위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62. <보기>는 설문지 문항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하루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의 순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 종이 신문 (    )    \* 라디오 (    )    \* TV (    )    \* PC (    )    \* 휴대 전화 (    )

4. 다음 매체들의 정보 전달 능력이 얼마나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 점수에 ○표)

	점수				
종이 신문	1	2	3	4	5
라디오	1	2	3	4	5
TV	1	2	3	4	5
PC	1	2	3	4	5
휴대 전화	1	2	3	4	5

5. 귀하는 종이 신문을 구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① 설문지의 1번의 각 선택지는 등가성과 상호 배타성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② 설문지의 2번은 응답자를 구분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이를 통해 명목 수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③ 설문지의 3번에 대해 어떤 응답자가 '휴대 전화'를 1, 'PC'를 2라고 응답했다라도 이 응답자가 '휴대 전화'를 'PC'보다 2배 더 이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④ 설문지의 4번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응답값을 모두 합한 값이 '휴대 전화'가 가장 크다면 응답자들이 '휴대 전화'를 정보 전달 능력이 가장 우수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⑤ 설문지의 5번은 비율 수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각 선택지에 대한 응답값을 통해 '종이 신문'을 구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63. ㉠, ㉡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어를 통해 선택지를 제시한다.
- ② 조작화를 위해 연구자는 각 선택지에 점숫값을 부여한다.
- ③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점숫값은 산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 ④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인다.
- ⑤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점숫값을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

64.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밤늦게 이루어진 설문 조사로 인해 응답자들이 피곤함을 느꼈다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② 조사 장소의 소음 발생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응답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완전 포괄성을 갖지 못하는 명목 수준의 선택지에 대한 측정값을 분석하는 경우라면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④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측정해야 하는데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묻는 설문을 하였다면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⑤ 지적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에서 고난도의 전문 용어를 사용한 문항을 제시하였다면 일시적 오류를 유발하여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65. ㉠과 바뀔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안(考案)해야
- ② 구성(構成)해야
- ③ 도입(導入)해야
- ④ 수립(樹立)해야
- ⑤ 준수(遵守)해야

[66~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과 해설 63p)

산업화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관심,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개인들이 공통의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인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하였다.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익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 행동하며 집단 간의 이해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며 인플레이션, 성장의 둔화, 실업률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 집단들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틀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 주목받게 되었다. 코퍼러티즘은 정부, 기업(자본가), 노동자 간의 정치적 협상이 사회 갈등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치·사회 이론으로, 흔히 조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주의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로 강조하는 생디칼리즘(syndicalisme)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산업 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가, 자본가,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은 근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정부도 이익 집단으로부터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퍼러티즘은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를 상호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보는데, 이는 ㉠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과 국가 간 유의미한 정치적 교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국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이 이익 집단들에 유리함이 있을 경우 정책의 실행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실행하기보다, 구성원 또는 군소 이익 집단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갖춘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동일 범주에 속한 군소 이익 집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모두 일종의 제약 아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전제한다. 이익 집단은 논의가 결렬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 각 분야의 이익 집단의 도움이나 합의가 없이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정책적 동력이나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교환을 위해 국가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과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적 이익 집단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익 집단들의 조직화와 서열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다.



6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익 집단들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국가 정책이 나타난다고 본다.
- ③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등한 관계라고 본다.
- ④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의 실행을 위해 이익 집단들 간의 서열 관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 ⑤ 코퍼러티즘과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익 집단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67. 밑글에 나타난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세기 이래 경쟁국들의 산업화에 직면했던 영국의 경우, 대외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합의하려 노력하거나 때로는 적절히 타협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양한 이익 집단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지니기에 적합한 것은 의회보다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이익 집단 간 이루어지는 의회 밖의 정치적 교환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전과 달리 행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 ① ‘다양한 이익 집단’은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국가에 제공해 줄 수도 있겠군.
- ② ‘의회 밖의 정치적 교환’은 국가와 이익 집단 간 상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로 볼 수 있겠군.
- ③ ‘국가적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국가와 대표적 이익 집단이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제약 아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군.
- ④ ‘행정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고, 국가와 이익 집단의 정치적 교환이 필요했던 상황과 관련될 수 있겠군.
- ⑤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 전문성을 지니게 되면 이익 집단에 유리한 정책일지라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정책 실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6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자유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익 집단들은 국가에 의해 변화되거나 조직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코퍼러티즘을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라 한다.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은 197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등의 신흥 개발 도상국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국가에서 정부는 이익 집단의 일종인 기존의 노동조합 세력들을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으로 바꾸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여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압하였다. 이로 인해 코퍼러티즘은 상당 기간 파시즘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 ①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이 해당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가가 이익 집단의 조직화를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이익 집단도 국가와의 정치적 교환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 ③ 국가가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한다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강제로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코퍼러티즘이 파시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 ④ 특정한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 개발 도상국에서는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 나타날 수 있었다.
- ⑤ 코퍼러티즘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익 집단들은 국가의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69.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화된 집단들 간의 마찰을 유발해 한 집단의 이익만을 증진한다.
- ② 국가와 이익 집단 간의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준다.
- ③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보장한다.
- ④ 국가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이익 집단 간의 경쟁에 의해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한다.
- ⑤ 국가의 통치력을 활용해 이익 집단의 서열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

수능특강 독서 2부 사회·문화 정답					
01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					
⑤	⑤	③	⑤	④	
02 이민과 이중차분법					
③	④	⑤	③		
03 정부 부채					
④	④	⑤	⑤	⑤	⑤
04 기후 변화와 미래 가치의 할인					
⑤	①	③	④	⑤	
05 범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①	⑤	②	②		
06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⑤	⑤	②	⑤	②	
07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⑤	③	⑤	⑤	④	②
08 스크린 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②	⑤	⑤	②	①	③
09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					
⑤	⑤	④	②		
10 신종 사채의 종류와 특징					
②	⑤	③	④	④	
11 정부의 입법 절차					
④	④	②	②	②	
12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선출 방식					
②	②	①	③		
13 측정에서의 척도와 척도 수준					
⑤	④	⑤	⑤	⑤	①
14 코퍼러티즘					
③	⑤	①	②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